

(2016년 연구조성사업) 축산과 환경의 공존 : 가축매몰지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6시
- 회의장소 : 충남연구원 3층 세미나실
- 회의참석 : 약 10여명 이내
- 회의록정리 : 1차 최돈정 박사, 2차 강마야 박사

소속기관	부서	참석자	연구분야
KEI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국토자연연구실	현윤정 부연구위원	수리지질학 지하수 유동 및 오염관리
KRIHS (국토연구원)	국토정보 연구본부	정문섭 연구위원	스마트 창조공간 정보화
강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배선학 교수	구제역 관련 공간분석 연구
축산신문	취재부	전우중 기자	가축매몰지 실태 중점 취재
충청남도	농정국 축산과	이관복 주무관	가축 매몰지 관리업무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이관률 연구위원/부장	지역개발 지역경제
	농촌농업연구부	강마야 책임연구원	농업정책 농업경제
	농촌농업연구부	김기홍 책임연구원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미래전략연구단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	공간정보 활용 ·공간통계

□ 회의 목적

- 충남 정책지도 돼지 구제역 시리즈 3호 「2015~2016년 충남 돼지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분석」 발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청취
- 전문가 집단의 가축 매몰지 연구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행 가축 매몰지 지침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방안 논의
- 추후 연구과제 설계를 염두해 둔 방향 설정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회의 주요안건과 전문가 의견

- 가축 매몰지 입지선정에서 고려할 핵심 사항
- 현행 가축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 가축 매몰지 제도개선의 관점

□ 핵심요약

-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상황, 가축질병의 토착화
- 매몰지의 환경위험성 측면에서는 수질환경 위험성이 가장 핵심
- 입지 및 환경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해결
- 매몰지 문제 출발은 축사건립의 문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문제
- 다양한 분야가 함께 모여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제도 개선 및 지침마련 제안(거버넌스 구축), 규제접근 방식에서 탈피
- 지침은 만능이 아니기에 개별주체들의 자발성과 책임의식 관건, 현장에서 최종의사결정 유연성 발휘 필요
-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써 과학적 방법으로 기초자료 구축, 자료의 공유, 데이터 기반의 정책관리

□ 세부내용

① 기초자료 구축과 공유의 시급성 및 필요성

- 각 기관별 자료의 생성/구축/통합시스템 등 별개 존재
- KHA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초기 구축과정 및 관리과정 미흡
- 기본적인 농가현황, 주소정보, 축산이력 등 기초자료부터 부재

☞ 대안

- 기관별 산재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
- 전국단위 위치정보 기반의 전수실태조사 중요
- 좌표기반 주소관리 등 기준에 의거한 항목 적용한 기초자료 구축
- 신뢰성있는 자료생성과 정보의 자유스러운 공유
- 국가통계와 지역통계가 결합되어서 더욱 촘촘한 자료가 되어 함

② (개선할 수 없다면)현재 상태에서 사후평가, 최소한 위험관리 노력

- 만약 지금의 제도나 지침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면, 최소한 현재 입지들에 대해서 정확한 환경위험성 평가 시도 필요

- 기타 각종 기준조차 미준수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 (예. 정기적인 소독의 날, 농장내 방역 및 소독시설 관리 등 개별농가의 자발성과 책임성 부족,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등)

③ 매몰방식 및 매몰지 관리방식 문제

-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FRP방식은 FRP통 비용문제(농업재정 투입)나 후속 사체처리(부패되지 않음, 3년만 지자체 관리, 이후는 관리안됨)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대안마련 시급

☞ 대안

- 기존 매몰지 관리차원에서 전수조사 등의 재점검 필요(3년 이후 매몰지 모두 포함, 2010년 이후부터)
- 이를 위해서 지침에 추가할 사항으로 매몰지 실명제 정착, 과거 매몰지 이력관리 등 제안
- 긴박하게 돌아가는 질병발생 상황의 대응조치는 하되 최소한 사후 평가와 매몰지 관리방식의 표준화 등 지침개선 작업 필요

④ 매몰지 입지선정 문제

- 매몰지의 현재기준은 환경피해 최소화에만 주력
- “부적합지 확보”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우선순위
- 광역단위 집적 매몰 혹은 소각장소 필요 (예. 공유지 혹은 국유지)
- 참고:현재 “차세대 국가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건강국토)” 구축 예정

⑤ 매몰지 환경위험성과 갈등 문제

- 매몰지로 인한 토양오염은 크지 않은 반면, 수질오염에 큰 영향
- 주민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악취문제 민감한 반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수질오염 문제 민감한 현실
-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갈등심화도 매우 큼

☞ 대안

-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현실에서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향후 환경위험성과 관련하여 매몰지 입지선정시에 “수질오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환경적 기준보다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기준 마련과 점검 중요

⑥ 체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지침 구축 필요성

- 현행 지침은 국토계획과 환경적 측면이 아닌 방역적 측면,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중심으로만 고민한다는 한계

☞ 대안

- 명확한 기준설정과 표준화 작업이 더 중요함에 불구하고 전문가와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으로 매몰지 최종의사결정은 현장에게 맡기는 유연함 필요
- 현재 축종별 방역시스템 부재한 관계로 가축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종별 방역시스템 구축, 세밀한 매뉴얼/지침 마련 필요
- 지침 자체도 유형화 필요(사전입지 선정단계, 사후관리 단계, 환경위험성 기준, 적지선정에 따른 정보제공 등)
- 축산업을 규제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하여 농가들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 중요

⑦ 전체적인 로드맵 구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
- 단계별·주체별·부처별·분야별·유형별·핵심사항별 체크리스트 도출
 - 환경/수의/축산/지역계획/입지/역사/문화/지질/기술 분야 전문가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종합적 접근
 - 가축사육단계부터 사양관리, 도축출하, 환경 등 재해와 재난대비 안전의식, 질병관리 등
- 비전-목표-전략-실천과제의 도출과 이를 위해서는 “부처/기관/각계 전문가 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수
 - 대통령직속 지역위원회를 비롯, 정책연구기관 및 지역별 연구원 등과 공동협력연구 수행 방식 필요
 - 법률입안과 관련하여 국회와의 협조체계와 파트너십 형성 중요

□ 전문가별 핵심의견

구분	의견
배선헌 교수 (강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매몰지 입지선정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자원 부분 - 매몰지 입지선정 시 가능 요인보다는 배제요인부터 탐색하는 접근 방식이 적절 - 적합지를 찾기보다는 부적합지를 선정함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연구자는 입지결정이 아니라 입지결정의 근거정보를 제공하는데

	<p>집중하고 의사결정은 현장 실무자의 판단분야로 두는것이 적절하며 너무 뻑뻑한 기준설정은 오히려 의사결정에 좋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데이터 생산 및 관리체계부터 정교하게 개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를 위한 자료의 공유체계 상당히 미흡하여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
전우중 기자 (축산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SOP는 대부분이 일본을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정성·정량적인 현장여건을 더욱 조화하여 반영하나 우리는 그렇지 못함 - 특히 우리가 만능이라고 하는 FRP공법을 포함한 저장조 형태의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검증과 비용효율,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을 해 봐야 할 시점, 호기호열도 마찬가지 - 다분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입지, 공법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며 입지자체 보다는 현행 공법에 대한 검증차원이 우선적이라는 입장 - 표준화된 기준/지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공법과 입지선정의 과정 필요
정문섭 박사 (국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공간(현장)과 가상공간(분석) 간의 조화가 이루어 졌을 때 스마트한 의사결정 가능 -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통합 플랫폼 개발이 필요 - 이는 중앙 주도의 시스템으로는 효용성이 없으며 지방정부 주도, 연합의 형태로 진행해야할 필요 - 역시 다분야의 네트워크를 형성 다분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자기집 앞마당이 아닌 화장터와 같은 식의 공동 소각장 매몰지 조성도 필요(중앙정부 주도) -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협력의사 가능성 - 축산업의 문제를 놓고선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주체별/분야별/ 핵심사항별 로드맵을 구상, 하나씩 실현 제안
현운정 박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지에 대한 환경적 기준 적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준으로 확대하여 종합적 접근이 필요(지역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 -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현실에서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국토계획과 환경적 연계를 통한 SOP개발 필요 -현행 SOP는 계획적 측면이라기보다는 방역적 접근중심의 계획,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방편적 성향이 강함. - 국가통계와 지역통계 간 촘촘한 결합이 중요, 기존통계의 적극적

	인 활용문제 중요
이관복 주무관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된 매몰방식(FRP방식)에 따른 지침의 변경 필요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침은 과거의 매몰방식에 초점을 둔 과거형 지침 · 그간 환경관리 측면에 소홀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가축질병의 원천 차단과 확산 방지가 급선무, 정책의 우선순위 - 구제역바이러스 발생원인 파악, 바이러스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문제, 지역내 도축문제(50%이상 외부으로 도축 출하) 등 · 축산인과 비축산인 간의 갈등문제 심각한 수준(농촌 문제) · 매몰지만 아니라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점검 필요한 시기 · 행정인력 배분과 업무량 문제, 제한적 인력으로 과다한 업무량
이관률 박사 (충남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지 입지선정 보다는 축사의 입지선정 자체를 관리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매몰지는 축산농가 내에 설치, 그렇다면 축사의 입지에 대한 관리적 제도가 선행적으로 필요 - 문제의 본질은 축사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긍정적 팩터보다는 부정적 팩터를 먼저 탐색하는 것이 중요 - 결국 축사의 입지와 매몰지의 입지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국내 특성 상 축사 입지 선정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
김기홍 박사 (충남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사례와 같이 매몰지 사전입지 확보를 해야만 신규축사가 건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를 일정부분 벤치마킹 하고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사후관리가 아닌 축산활동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부터 매몰지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갖추어지도록 유도할 필요 - 매몰지 자체에 대한 분석적 차원의 준비와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
최돈정 박사 (충남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지 부분에서 기초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며 구축된 데이터의 정확도 부분 또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선정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너무 뻑뻑하게 적용하기 보단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분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보조 데이터 체계의 마련과 공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기 - 또한 이미 조성된 매몰지의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고 적절할 매몰지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매몰지 조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할 필요